

민주 “강제징용 제3자 변제, 韓 외교사 최악 굴욕”

“日 관계 개선 위한 尹 강한 의지 국민 보호할 정부가 日 대변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발표를 앞두고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잠사·거짓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어 “윤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성의 있는 호응” 요구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도 안 하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법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며 “윤 정부가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이 해법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지렛대 삼아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가해국이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이 해법 찾기에 분주하더니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할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3·1절 104주년 기념사에서 일제 식민지 침략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더니,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있어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 국민을 보호

해야 할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앞서 한 언론은 한국과 일본 정부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6일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이 배상금을 우선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日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에 지역 단체 반발

“입장표명·국민대회 등 대응” 시민사회 “정부가 피해자 외면”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한일 양국이 합의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두고 광주지역 시민 단체들이 대대적인 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오전 공식적으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한다. 이번 배상안의 내용은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배상안'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줄기차게 반대해 온 방안이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양 할머니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정부 발표 직후 광주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 7일에는 전국 6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 2차범국민대회, 국민행동제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3·1범국민대회에서 양 할머니는 “(사죄 없이) 아무리 굶어 죽어도 그런 돈 받지 않겠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배상안을 규탄했다.

시민모임 역시 제3자배상안에 대해 꾸준히 “망국 해법”이라며 비판해왔기 때문에 정부 발표 이후 대대적인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제3자배상안을 사실상 공식화한 공개토론회때부터 줄곧 반대해왔지만 결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공식 발표전대로 배상안이 진행되지 않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김혜민 기자



이재명, 인천 현대시장 화재현장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

尹, 한일·한미 정상외교 속도전... ‘미래 안보·경제 협력’ 방점

與 전대 ‘역대 최고’ 투표율... 김·안 “내가 유리”

김기현 “네거티브에 당심 폭발” 안철수 “당원 분노가 드러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5일 전당대회 1일차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양강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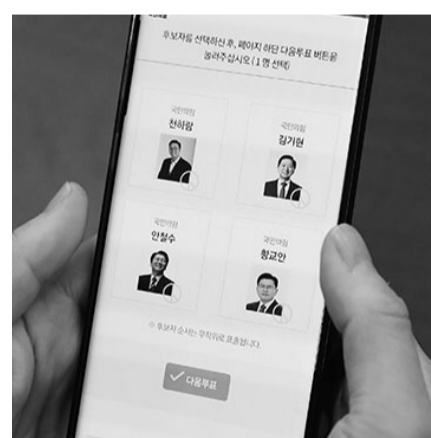
김기현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YPT 청년정책 콘서트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데 후보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다 유리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질문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김기현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 들어오는 것을 종합하면 그간 민주당과 마치 합작한 것처럼 전대를 내부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한 것에 대한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는 “당을 안정적으로 확고히 하는 리더십을 세우는 사람이 김기현이고 (이를) 적극 지지해야 안정성에서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당원이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당대표는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당을 안정시켜야 한다. 안정된 힘으로 원팀을 이뤄서 내년 총선 이기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당원들의 의지가 현장에서 아주 강하게 불어오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같은날 국회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나를 투표일 중 첫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진행중인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직자가 모바일을 통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

날 투표율이 거의 35%에 달했다. 놀라운 투표율”이라며 “저도 예상하지 못했다. 당원들의 속마음이 모인 집단지성이 투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과 몇몇 사람이 당과 당원을 존중하지 않고 수직적 관계로 만들려고 한다”며 “당원들이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왜 대선에 공이 있는 사람을 적으로 몰아 내치고 있나. 당 외연확장의 상징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도 총선 승리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천하람 후보는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놀랍다. 침묵하던 다수의 반란이다. 4시간여 만에 20만명, 25%의 투표율을 돌파했다. 산술적으로 봐도 이 정도 투표율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은 없다. 가히 민심의 태풍이 불고 있다”고 반색한 바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일·미 양자 방문 유력 반도체지원법 논의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자 현안 해결을 위한 정상외교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안 파장을 최소화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협상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를 통해 한미, 한일 간 미래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미국 방문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측 간 포괄적인 관계 증진, 나아가 한미일 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외교 당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

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사고 문제와 관련해 절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동력삼아 정상 간 셔틀외교복원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일관계 회복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초 속에 한국 정부는 제3자 대위변제라는 절충안을 공식화했으나, 일본 기업 참여 문제를 놓고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게 되자 양국 경제인 단체를 장구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 첫 미국 방문 일정과 수준 등도 확정지을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4월 말께 국민방문하게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민방문이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행동하는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정순신 사태에 “尹 정권 왜 사과하는 사람이 없나”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인한 정순신 변호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왜 윤석열 정권에는 정순신 사태에 누구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나. 왜 누구하나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느냐”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재차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변호사

의 아들은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학폭 피해자인 학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려 입원했고 대학 진학에도 실패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학폭 가해자는 재판으로 시간 끌며 입시에 성공하고 피해자는 인생의 골든타임을 망치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면 그게 공정이고 정의냐”고 비판했다.

그는 “나랑 같이 일해본 사람이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있어도 무조건 감싸는 것이 윤석열식 정의냐”며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흐지부지 넘어갈 생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윤 정권에 경고한다. 국민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인사 책임자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났는데 인사부터 경제까지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라고 꼬집었다.

서울=김선욱 기자